

여수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들어선다

전남도 1149억 들여 3000명 수용 회의장 등 기본 계획안
관광자원 등 시설 구축, 해양·석유화학 산업 기반 갖춰

전남도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 국제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전시장 규모는 8000㎡로,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의 사업비는 1149억원이다. 전남도는 9일 "전시·컨벤션(MICE) 및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 특성산업의 국제화 및 진흥을 위한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기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컨벤션 전시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경제성과 산

업 경쟁력 등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적정 건립 규모는 국제회의시설 규모로 전시장 8000㎡, 3000명이 수용 가능한 회의장 5000㎡다. 건립 비용은 부지 매입비 포함 1149억원이다. 이같은 건립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1.02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립 부지는 산업 경쟁력을 위한 부지 면적 확보와 전시관 확충 가능성, 워터프론트(WaterFront) 형태의 특색있는 센터 구

축을 위해 박람회장 B부지로 제안했다. 운영 조직은 단독 법인 설립에 의한 간접운영 방식 형태로, 2분부 5팀 26명 규모의 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재무성 분석 결과 센터 가동률 35%를 시작으로 매년 5%씩 늘어 운영 7년차부터 65%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4년째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의 대규모 전시·컨벤션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응한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여수세계박람회장은 호텔, 중·소형 컨벤션시설, 풍부한 관광자원 등 연관 시설이 이미 구축돼 있고, 해양, 석유

화학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꼽혔다. 박람회장 사후활용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었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관광은 "관광객 6000만 시대를 열기 위한 전시·컨벤션(MICE)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헝가리 침몰 유람선 이르면 오늘 인양

본 와이어 자리 잡으면 선체 수색 방식 결정 안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야니호 인양이 이르면 10일 또는 11일(이하 현지시간) 이뤄질 전망이다. 헝가리 대테러청(TEK) 여센스키 난도르 공보실장은 사고 발생 11일째인 지난 8일 오후 현지 언론과 한국 취재진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월요일(10일)이 가톨릭 성령강림 대축일 휴일인데 그중에는 (인양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 측 현장 관계자는 "지름 22mm 본(本) 와이어가 자리를 다 잡으면 아마 월요일쯤에는 (인양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인양 시기가 사실상 헝가리 TEK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M1 방송 등 현지 매체들은 11일 인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 인양 준비 상황에 따라 10~11일 TEK가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지매체인 index.hu는 크레인인 배를 수면까지 올린 뒤 배수를 하고 바지선에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헝가리 측은 "10일은 공휴일이라 선체 작업을 계속해도 공식 브리핑은 할 수가 없다"며 "11일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전이라도 중요한 사안은 국영 통신인 MTI를 통해 전달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 대령은 선박 인양에 4시간이 걸린다면 와이어와 크레인을 연결하는데 3시간, 크레인이 와이어를 드는 데 1시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는 물을 빼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았다. 선체를 물 밖으로 들어낸 뒤 바지선에 올려 선체 내부 수색을 할지, 어느 정도 인양을 한 뒤 와이어에 고정된 상태에서 잠수요원들이 선체 내부 수색을 할지 등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선체 수색을 할지와 선체를 제3의 장소로 옮겨 수색할지 등의 문제가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전남도 2022년까지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1000호로 확대한다

전남도가 현재 140여호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2022년까지 1000호까지 확대한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비 37억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사업(20억원), 동물복지형 축산 시범사업(20억원),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6억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5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이란 여유 있는 사육 공간, 가축 운동장 확보, 축사 악취 관리, 농장 경관 조성 등 동물복지 사육 및 위생적 사양관리를 통해 기존 관행축산과 차별화를 뒀 운영되는 축산구조다. 정부의 동물복지 인증 제도의 징검다리 단계로 전라남도에서만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 현재까지 143호가 지정됐다. 축종별로는 한우 69호, 젓소 6호, 돼지 16호, 육계 15호, 산란계 20호, 오리 7호, 염소 10호 등이다. 심사 절차는 서류 심사와 현장심사 2단계로 진행된다. 현장심사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농가에 대해 가축 사육 밀도, 가축 운동장 확보 여부, 축사 정결 상태 등 22개 항목을 평가한다. 지정 농가에는 농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300만 원을 지원하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세계수영대회 추진 상황 보고회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 핵심사업 국가계획 반영·예산지원율”

김영록 지사, 국토부장관 면담
압해·화원 해상교량 변경 등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지역 기반시설(SOC)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현재 수립중인 국가철도망, 대도시권 광역교통 등의 국가계획에 광주·전남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하고, 지역 기반시설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김 장관에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남의 핵심 기반시설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현안사업

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 용역을 최근 발주한데 이어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년~2025년)도 조만간 수립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달빛철도), 익산~여수 간 고속철도 사업, 광주 하남~장성 삼계-광주 대촌~나주 급전-광주 삼도~함평 나산 간 광역도로 사업 등의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압해·화원(달리도~화원 구간)해상교량으로의 변경, 훈련용 항공기 전용 비행장 건설의 국가 지원 등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각 부처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임용 전 범죄' 하회섭 노동협력관 사직처리

하회섭 광주시 노동협력관(개방형 4급)이 사직처리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7일 하 회협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임용 4개월만에 사직서를 낸 지 1주일 만이다. 하 회협력관은 건강 문제를 들어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임용 전 범죄가 최근 드러난 것이 부당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하 회협력관은 최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벌금 300만원(추징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 유죄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하 회협력관의 비위가 공직에 임용되기 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사직서만 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방형 직위 공모의 경우 자기검증 기술서 등 제도 보완을 거쳐 유사한 논란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절차를 거쳐 조만간 노동협력관 공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협력관은 광주시의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로 역점 시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노사상생도시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김치타운 입점업체 학교급식 납품 탈락

위생상태 불량 판정
광주김치타운 내 입점 업체가 학교 급식납품 심사에서 위생상태 불량으로 탈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민주·남구)에 따르면 지난 1월 김치타운 내 A업체가 광주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공동 납품 심의에 참여했다가 탈락했다. 지난해 5월 광주시와 계약을 맺고 김치타운에 입점한 A업체는 광주시교육청 공동 납품 심의에서 위생상태 불량으로 판정

받았다. 당시 심의에는 A업체를 포함해 총 11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A업체와 다른 1곳 등 2곳이 탈락했다. 광주시는 A업체가 학교급식 납품에서 탈락한 후 문제가 된 시설을 보완했다. 김점기 의원은 "김치타운 내 김치공장은 공유재산으로 광주시가 임대하기 전 시설을 개선해야 했다"며 "광주 학생들에게 조차 공급하지 못하는 김치를 전국화, 세계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